

2013년도

주요 업무 보고

2013. 1. 23(수)

행정국

보고 순서

I	정책환경 분석	1
II	정책 목표 및 방향	2
III	주요사업 추진계획	4

I

정책환경 분석

시민 참여 - 공공정보의 공유와 적극적 활용이 참여의 전제

- 주민참여예산, 희망씨앗, 시민참여옴브즈만 등 시민 참여 활발
- '서울플랜 시민참여단', '스토리텔링단', '시민청' 등 시민참여 확대 예상
- 정보 공유는 알권리를 넘어 시민 아이디어와 부가가치 창출의 공공재로 부각

내부 직원 - 직무역량에 대한 시민 기대, 삶의 질에 대한 직원 요구 동시 증가

- 시민 사회 참여 확대, 지방자치 심화에 따른 업무처리의 복잡성 가중
- 급격한 사회변화·기술발전, 다양한 행정수요로 직무 전문성 요구 수준 증가
- 생활패턴의 변화로 '일과 가정의 양립'에 대한 직원요구 증대

시민사회단체 활동 - 역할 기대에 비해 미흡한 지원

- 마을공동체, 민자사업 개선, 복지기준 마련 등 서울시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주체로서 시민사회단체 역할 증대
- 시민사회단체 수는 빠른 증가 추세('06년 23천개→'09년 26천개 13%↑), 운영 기반은 열악
 - 상근 활동가 5명 미만 소규모 단체 61.2%, 절반이 연간 예산 1억미만
 - 활동단체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미흡, 연대와 시너지에 한계

시와 자치구간 관계 - 공동체 VS 자치권

- 민선 출범 20년, 자치구는 「서울공동체」보다 자치권을 더욱 강조
- 시·자치구간 정책적인 견해 차이에 따른 갈등 요인 상존
 - 「강남북 균형발전」 VS 「지역발전, 주민민원 해소」
- 2013년 자치구 평균 재정 자립도 41.8%, 매년 감소 추세
 -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기반 약화, 복지수요 확대로 재정여건 악화(복지예산 44.6%)
 - 공약 등 이유로 문화·복지시설 등 외형적 확장, 고정비용 증가

Ⅱ 정책목표 및 방향

1 정책 목표

정책 파트너



정책 목표표

■ 행정정보와 공공자산의 공유 확대

- 행정공표 목록 확대 : 64종('12) ⇨ 270종('13)
- 공공시설 개방 확대 : 201개소('12) ⇨ 736개소('13)

■ 직무역량 강화와 일과 삶의 균형

- 전문관 양성 : 현재 1,200명 ⇨ 1,400명('14) ⇨ 2,000명('20)
- 유연근무 확대 : 794명('12) ⇨ 1,000명('13) ⇨ 2,000명('14)

■ 활동역량 강화 및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

- 네트워크 구축 : 시정참여인사 476천명('13.9) ⇨ 시설단체('13.12)
- 활동공간 조성 : NPO 센터 설립('13) ⇨ NPO 빌딩확보('14)

■ 상호 협력강화로 상생하는 지방자치 구현

- 협력채널 다각화(간부진-실무자), 시책 수요재원 확대 (300억)
- 행정직군 시구 인사교류 확대 : 144명('12) ⇨ 420명('13)

행정 정보 및 공공 자산의 **공유** 활성화로 시민참여 확대

- 모든 업무추진 과정의 철저한 기록관리로 행정정보의 체계적 축적
- 투명한 정보공개 지속 확대로 시민 알권리 및 시정참여 보장
- 행정정보에 대한 시민 접근성 제고 및 정보공유 문화 확산
- 시·자치구 공공시설의 시민 개방 확대 및 민간 시설 개방 유도

 공감하는 인적자원 관리로 직무역량 강화 및 일과 삶의 균형 유지

- 직무전문성 향상을 중심으로 「채용-전보-교육-보직관리-승진」의 체계적 개선
- 직원 재충전 기회 확대 및 최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

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

- 시민사회와 소통과 협의를 통한 「시민사회 발전 종합계획」 수립·시행
 -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동참과 실질적 반영
- 다양한 풀뿌리 단체의 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기반 조성
- 재정지원 방식의 효율적 개선 및 시민사회단체간 네트워크 구축

 시와 자치구간 **협력**강화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구현

- 시와 자치구간 상시 협력창구 운영 및 협력채널 다각화로 상생기반 구축
- 자치구 재정지원 방식 개선으로 공동·협력사업의 실행력 확보
- 시·자치구간 인사교류 활성화로 상호 이해 증진 및 균형발전

Ⅲ 주요사업 추진계획

I	행정정보, 공공자산의 공유를 통한 시민참여 확대	5
①	행정정보 전면공개 및 공공시설 공유 확대	5
②	시민체감형 시정통계 공유 확대	7
③	시정기록물 통합관리 체계 구축	8
④	신청사 서울시민 명소화 추진	9
⑤	생활 속 안전을 지키는 특사경 활동 강화	12
II	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행복한 일터 조성	14
①	공무원 전문능력 배양	14
②	신명나게 일하는 일터 조성	18
III	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	21
①	시민사회단체와 생산적 파트너십 강화	21
②	시정관련 「민간조직·단체」 네트워크 구축	22
③	시민사회단체 활동공간 조성	23
④	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지원 대책 수립·시행	24
IV	시·자치구간 협력 강화로 자치역량 제고	25
①	시·자치구간 협력 시스템 개선	25
②	자치구 재정지원 방식 개선	26
③	시·자치구간 인사교류 활성화	27
※	'13년 행정국 일자리 창출 계획	29

I . 행정정보, 공공자산의 공유를 통한 시민참여 확대

〈 현황 및 실태 〉

- ◆ 행정정보 전면 공개 추진으로 정보 공개율 증가, 이의신청 감소
 - 정보공개율('11년 94.6%→'12년 97.5%), 이의신청 건수('11년 57건→'12년 26건)
- ◆ 통계서비스는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이 필요한 생활밀착형 통계자료는 부족
 - 통계서비스('11년 676개→'12년 741개 정보), 동단위 통계자료('12년 38개)

희 망 일 기 - No.14, 303

- ◆ 신청사 이전과 관련, 전임시장이나 시청의 공문서, 사진 등을 모으는 방법 모색
- ◆ 시장 기록물 관리에 대하여 관련 법률개정 추진 또는 조례, 규칙 제정
- ◆ 市와 산하기관의 다양한 기록이 통합적으로 관리·활용되는 시스템 구축
- ◆ 시·자치구 공공시설 공유 및 기업이나 타 기관들의 참여 유도

1 행정정보 전면공개 및 공공시설 공유 확대

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

- 부적정 비공개 최소화 및 사전적·적극적 정보공개 확대 시행
 - 직권심의, 주심제도, 위원 교체위촉 등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화
 - 비공개·부존재결정의 타당성, 내용의 적절성 등 정보공개 상시모니터링
 - 정보공개 처리 실태 실·국 평가제 및 자치구 인센티브제 도입
- 행정정보 공표목록 확대
 - 시민 관심 사전공표 목록 확대 : '12년 64종 ⇨ '13년 270종
 - 시민 관심사항 위주의 적극적인 사전공표 대상 발굴·확대
- 국장이상 결재문서 공개추진 : 연간 약 9만여건(과장이상 14년 하반기)
 - 공개대상 결재완료 문서 정보소통광장으로 자동전송 공개시스템 구축

□ 정보공개 마인드 정착 및 소통문화 확산

- 대내·외 직원 재교육 및 상시 교육체제로 정보공개 마인드 내재화
 - 市, 자치구, 투자·출연기관 실무자, 관리자 대상 교육 실시
 - 인재개발원에 교과과정 신설 등 정보공개 마인드 내재화
- 산하기관 및 자치구 정보공개 확산유도로 소통문화 정착
 - 산하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 행정정보 전면 확산
 -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되, 市와 일관된 방향으로 정보공개 정책 추진 유도
 - 투자출연기관 : 정보공개 시책 경영평가 반영
 - 자 치 구 : 비공개 최소화 등 정보공개 사업 인센티브제 실시
 - 사전 의견수렴, 협의를 통한 정보공개 평가지표 확정

□ 정보소통 광장(홈페이지) 전면개선

- 시민관심 위주 행정정보로 공개메뉴 재구성
- 이용자 중심으로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이용편의 제공
- 정보공개 유형별 공개프로세스 마련 및 기능별·부서별 분류체계화
- 정보소통 광장 전면개선 정보공유의 장으로 운영('13.10월)
 -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

□ 시·자치구 공공시설 유희공간 개방 추진

- 공공시설 유희공간 개방 : 총 736개(시 33, 5개구 703)
 - 1단계 시범개방('12.7.30) : 201개소(시 33, 5개구 168)
 - ※ 시범 개방공간 이용현황('12.7.30~12.31) : 858건
 - 2단계 전면개방('13.1.1) : 535개소(20개구)

○ 개방공간 시민이용 활성화 추진

- 시 및 자치구 홍보매체 적극 활용하여 개방공간 이용 집중홍보
 - 시 : 각종 홈페이지, 일간지, SNS, 포스터, 유관단체 홍보 등
 - 자치구 : 지역 소식지, SNS, 직능단체회의, 동아리모임, 친목회 등
- 시민이용 우수사례 발굴·전파 및 유희공간 추가발굴 개방

○ 민간분야 공간개방 지원협력(서울혁신기획관 주관)

2

시민체감형 시정통계 공유 확대

통계작성 현황

- 전수조사 : 8종 (사업체, 인구·주택·경제 총조사, 광업제조업, 농·임·어업 등)
- 표본조사 : 3종 (서울서베이, 유동인구조사, 8개 자치구 사회조사)
- 기 타 : 4종 (통계연보, 주민등록, 구단위 GRDP추계, 도시통계 등)
- 행정통계 : 741개 통계표관리 (시 : 316개, 구 : 387개, 동 : 38개)

통계서비스 현황

- 홈페이지 통해 741개 통계를 DB형태로 제공 : 1일 809명
- GIS를 기반으로 소지역 맞춤형정보 제공(지능형도시 정보시스템)
 - 인구, 주택, 사업체, 유동인구, 주요시설, 차량통행량 등 8종
- 기타 통계간행물(3종)발간, 월간 통계분석정보 제공
 - ※ 서울서베이(정책지표분석서비스), 통계연보(기본통계), 사업체조사(산업정보)

시민체감형 시정통계 체계 확립 및 대시민 통계서비스

- 시정통계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
 - 분야·시기·대상 등 시정통계 관리기준 정립 : 전문가 자문, 통계청 컨설팅
- 사회변화와 시민 삶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통계 정보 발굴·제공
 - 시민이 체감하는 동단위 통계 확충 : '12년 38개 → '13년 68개
- 시정통계 분석서비스 강화
 - 주요 정책 및 시민체감 생활영역에서 이슈가 되는 통계 월단위 분석제공

합리적 시정추진을 위한 통계서비스 확충

- 사업체조사(3월) 및 2013 서울서베이(10월) 실시
 - 산업정보 및 도시정책지표를 조사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
- 시정분야별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통계연보 발간
- 도시정보시스템 자료갱신을 통하여 소지역단위 통계서비스 확충

3 시정기록물 통합관리 체계 구축

□ 모든 업무추진 과정의 기록관리 강화

○ 비 전자 기록물의 유형별 생산·관리 기준 정립

-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생산되는 기록물 매뉴얼 마련
- 접수문서, 민간보조금정산서, 시청각기록물, 연구용역보고서 등

○ 보존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·활용을 위한 DB구축 지속 추진

- 매년 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 DB화(약 200만면) 및 목록작성
- DB구축 대상 : 22,329천면(DB구축 실적 10,298천면/46%)

○ 민간이 소장한 시정 중요기록물 수집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

- 중요기록물 소장정보 파악, 공모전 개최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유도
 - 수집 기록물은 정보소통광장, 서울기록문화관 등 시민공유 공간 연계활용
 - 교육기관, 시민단체 등 각급 관련 단체 배포 및 시민, 학생 교육프로그램 활용

□ 「서울 기록원」 건립 추진

○ 접근성이 양호한 적정부지 검토확정('13.1~2월)

- 검토부지 : 서울대공원, 녹번동 산 1-2, 남양주 시립양묘장, 월드컵공원내

○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('13.3~9월)

- 입지조건, 보존환경 분석, 유관기관과의 역할 및 기능 분담 등

○ 기록물 생산·관리 및 보존을 위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

□ 지속 가능한 기록관리·정보공개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

○ 서울특별시 기록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

- 기록물 관리, 시장기록물, 서울기록문화관 운영, 서울기록원설립 등

○ 서울시 공공DB 제공에 관한 조례 제정

- 서울시 공공데이터베이스 제공관련 정책수립·추진 시 필요한 사항 등

○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면개정 추진

- 회의공개, 결재문서 공개 및 공표대상 확대 등 근거 규정 마련

4 신청사 서울시민 명소화 추진

〈 현황 및 실태 〉

◆ 청사운영 현황

계		신청사		서소문청사		을지로별관		남산별관	
연면적(m ²)	인원	연면적	인원	연면적	인원	연면적	인원	연면적	인원
156,228	4,711	90,743	2,135	42,980	2,028	4,291	268	18,214	280

◆ 실태

- ▶ 신청사 입주후 기대에 비해 넉넉지 않은 업무공간 불편 해소 필요
- ▶ 신청사 1층 로비, 하늘광장 등 시민이용공간의 특색 있고 인상적인 활용 필요

희망일기 - No.46,120,303

- ◆ “공감”과 “경청”의 컨셉이 청사 전반에 녹아나도록 청사 조성·운영
- ◆ 신청사투어에 방문객들이 스스로 재미있는 사연들을 추가하도록 구성

□ ‘공감’과 ‘경청’을 담은 청사 BI(Building Identity) 정립

- **외부 전문가 아트 디렉터 위촉** : 공간 활용 아이디어 제시, 문화적 관리 방안 자문
 - 디자인·문화·예술·전시분야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전문가 활용
 - ※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김상규 교수 및 전문 계약직 채용(2월)
 - 청사 디자인 및 전시, 예술작품 설치 등 조형적 표현에 대한 기본 방향 설정
 - 신청사 기능적인 면과 예술적인 면의 조화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
 - 사무공간, 시민이용공간, 자투리·여백 공간의 균형있는 활용 매뉴얼 마련
- **협업을 통한 내부 자원 활용** : 디자인정책과, 문화재단 등 협업체제로 운영



※ 신청사 BI 정립 및 공간 활용 방안 연구(김상규 교수) : 1월말 착수 → 3월말 완료

□ **청사 BI 적용 사무공간 디자인 개선 및 최적 공간 활용**

- BI 자문관 및 내부 전문가(TFT) 합동, 부서별 공간 활용 실태 진단·분석(1~3월)
 - BI 정립과 동시에 진행하여 사무 공간·시민이용 공간의 일관된 방향 유지
- 개인, 공용, 휴식 등 공간별 기능과 특성에 따른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
- 집기 배치, 자료 정리 등 공간활용 등 부서 특성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및 예산지원(부서 자체예산 40% / 총무과 지원 60%)
- 엘리베이터 앞 벽면 등 여백공간 활용 부서별 스토리가 있는 공간으로 구성

□ **공간별 특화된 상설 전시 기능 유지 - 세부계획 별도 수립**

구 분	공 간	테 마	주요 전시 내용(안)
신청사	하늘광장 (8층, 9층, 10층)	서울 구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시민(전문)작가 초대작품 전시 - 흑백영화속 서울 등 ● 서울시민 사진 및 회화전(서울의 4계, 숨은 절경 등) ● 서울관광 명소 ToP 10전(10층)
	1층로비	소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시정 관련 주요 정책 시민과의 소통 - 2013 서울시 좋은 간판展, 을지로展(도시구조), 자원봉사 활동기록展 ● 서울시 직원 및 주변 민간업체 직원 동호회 작품 전시
	6층 시장실 앞 2층 유희공간	쉼과 여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‘세상을 바꾼 문서들’(무상급식 등) 및 외빈 선물 전시 ● 休(쉼)이 있는 전시공간 - ‘서울의 손길’ 서울 수제품 전시
도서관	서울기록문화관 3층	역사 체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역대 주요시정 테마 기록물 전시 - 한강, 서울성곽 등
광 장	광 장 (서울,청계,광화문)	시민 참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진, 그림, 조형물 등 시민, 가족 공모전 등
야 외 공 간	도서관 연결통로 등	자 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서울의 꽃(개나리), 계절 꽃, 도시농업작물 등 계절별 테마 전시

➔ **아트디렉터·인부전문가 자문 및 시민청 갤러리 운영과 연계, 연간 전시계획 수립시행**

□ 스토리 발굴 및 관광 편의 지원으로 신청사만의 특색있는 투어 운영

- 투어코스 확대 및 전문투어코스를 활용한 다양한 계층의 투어수요 충족
 - 시민청 개청에 따른 투어코스 확대 및 기념품숍을 투어 종점으로 활용
 - 건축, 에너지, 도시안전 분야, 도시교통 등 전문투어코스 확대
- 전문가 활용 스토리텔링 콘텐츠 지속 발굴
 - 작가, 기자, 기획사, 홍보전문가 등으로 스토리 발굴 기획단 구성·운영(2월)
 - 청사, 도서관, 광장의 역사·사회적 의미 및 광장 행사, 시민 방문기 등 관련
 - 시정업무와 관련된 스토리 발굴을 통하여 대시민 시정홍보 병행
 - 발굴된 스토리를 상징물, 조형물 등 형태로 유형화하여 투어코스에 추가
- 「셀프투어 가이드북」제작·제공 및 가이드 교육 정례화로 방문객 편의 제공

□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·소통 공간으로서의 다목적홀 운영

- 유휴 시간대 시민 개방을 통하여 시민 이용 수요 충족(2월 개방)
 - 휴일은 90일 전, 평일은 14일 전까지 내부 수요 우선 확정 후 유휴 시간 시민개방
 - ※ 시설규모 : 신청사 8·9층 814,92㎡ / 512석(8층 330석, 9층 182석)

□ 신청사 야간 경관조명 운영

- 공중에 떠 있는 문화공간으로 심장이 박동하는 듯한 서울시의 역동성 표현
 - 일몰 30분후~23시 / 동,하절기 전력 위기기간 제외
 - 중요 축제, 이벤트 행사 및 시민 호응도를 반영
 - 계절별, 시간대별 색상변환 컬러 연출 고려



□ 광장의 도심휴식공간 기능 강화 및 투명한 운영 체계 확립

2012년	2013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대규모 행사 위주 운영 ⇒ 시민이용 제한 및 시설물 훼손 ◆ 임시회 위주 위원회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기회 2회, 임시회 4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도심 휴식공간 기능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규모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 유치 및 휴게의자 설치 ⇒ ◆ 신청 처리현황 및 위원회 회의록 실시간 온라인 공개 ◆ 정기회 주기적(분기1회) 개최 및 소위원회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분기별 1회 정기회 개최 및 서면심의 활용

5

생활 속 안전을 지키는 특사경 활동 강화

〈 현황 및 실태〉

- ◆ 한-미, 한-EU 등 FTA 체결 확대로 식품 등 먹거리 안전관리 요구 증대
 - 식품 등 먹거리 수입증가에 따라 신중유해물질 등 안전사각지대 관리 필요성 대두
- ◆ 대기 중 오존 및 이산화질소 오염도와 한강 부유물질(SS) 오염도 증가 추세
 - 자동차불법도장, 도금·염색 등 유독성 폐수 무단방류 등 사각지대 집중 단속 필요
- ◆ 강남권역 등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멀티방, 키스방 등 신·변종 청소년유해업소 증가
 - 시내 유흥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날로 확산,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개선요구 증가
- ◆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불법 위조상품(짜퐁) 범람, 국가신뢰도 실추
 - '명품짜퐁' 등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규모 년 1조 4천억원, 중소기업 4곳 중 1곳 피해

□ '12년 추진실적

- 8개 분야 1,170건(구속 6명) 형사입건 / '상표권 침해분야' 수사권 확대
 - 식품 725, 원산지표시 40, 환경 136, 공중위생 47, 의약 24, 청소년보호 67, GB보호 96, 상표권 35

□ 분야별 중점 수사방향

✓ **최중 판매책 중심 수사** → **제조유통책 등 전방위 심층수사로 범죄행위 원천 차단**

- **식품·원산지** : 부정·불량식품 제조·유통, 원산지 허위표시 척결
 - 다소비 식품 위주 생산·가공부터 판매, 최종 소비까지 단계별 불법행위 수사
- **공중위생·의약** : 공중위생 단속 강화 및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
 - 웰빙 붐에 편승한 불법 건강기능식품 제조·유통 척결 및 위생실태 단속 강화
- **환경·GB보호** : 대기·수질 오염 근절,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
 - 상시모니터링 강화, 은닉 배출 및 운반·처리 업소 대상 수사 강화
- **청소년보호·상표권** : 청소년 위해요인 해소, 불법위조상품 근절
 - 청소년 유해 매체물·업소·행위 입체적 단속으로 유해환경 발본색원
 -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등 연계, 상표권 수사역량 지속 강화

□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

○ 지명과 동시에 수사 착수가 가능토록 단계적 준비 계획 추진

－ 1단계 : 인권침해 등 서민경제 피해가 심각한 대부업 분야

✓ 법무부 ‘지자체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’ 관련법 개정(안) 국회 상정 예정(‘13년 4월)

• 대부업 수사 준비 TFT 기 구성 활동 전개(‘12.12월~)

－ 구성 : 5명(검찰청 파견 유경험 우수 수사관)

－ 경찰,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협조 체제구축, 불법대부업 동향 및 피해 사례 자료수집·분석, 위법행위 적용 관계법령 검토 등 사전 준비

• 지명과 동시 수사 착수(‘13. 5월)

－ 수사역량자 5명 추가 투입(총10명), 120 등 우리시 피해신고 접수분 대상 즉시 수사

• 전담팀 신설 본격 수사(‘13. 6월)

－ 1개팀 16명 정원 및 인력확보(조직담당관, 인사과 협의)

－ 2단계 : 다단계 등 민생안전 관련 분야 직무범위 확대 지속 추진

□ 수사전담 특사경 전문성 확보

○ 자치구 파견인력을 시 인력으로 교체, 업무의 연속성·전문성 제고

－ 자치구 파견 인력(75명)은 전체 특사경의(106명)의 71%를 점유, 매년 파견인력의 40% 이상이 교체되어 수사역량 제고에 한계

－ 현장수사 인력을 시 50% : 자치구 50%로 조정(‘14년까지 단계적 추진)

【현장 수사인력 조정】

▶ 현행 100명(시 25, 자치구 75) → ‘14년 100명(시 50, 자치구 50) : 시(+25), 자치구(△25)

○ 다년간의 현장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 수사인력 확보

－ 전문직위로 지정(인센티브 부여)하여 장기근무제 도입

○ 전문수사관 양성을 위한 특사경 직무교육 강화

－ 기본 직무교육(2주, 자체교육), 법무연수원 위탁교육, 멘토활용 OJT 교육 등

II .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행복한 일터 조성

〈 공무원 전문성 및 직장문화 실태 〉

◆ 다양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수요 증대에 대응할 행정전문가 부족

- 채 용** - 일반지식 시험 위주의 신규채용 ➡ 전문가 채용 미흡
- 보 직** - CDP 및 새서울전문인제도 ➡ 가점 취득에 활용 및 한정된 분야
- 승 진** - 경력 위주 승진 ➡ 역량있는 관리자 선발 한계
- 전 보** - 잦은 전보(연2회) ➡ 전문지식 축적 어려움
- 교 육** - 소양·사이버교육 위주 ➡ 직무전문성 향상과 연계 미흡

◆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한 재충전 기회 미흡 및 다양한 사기 진작제도 부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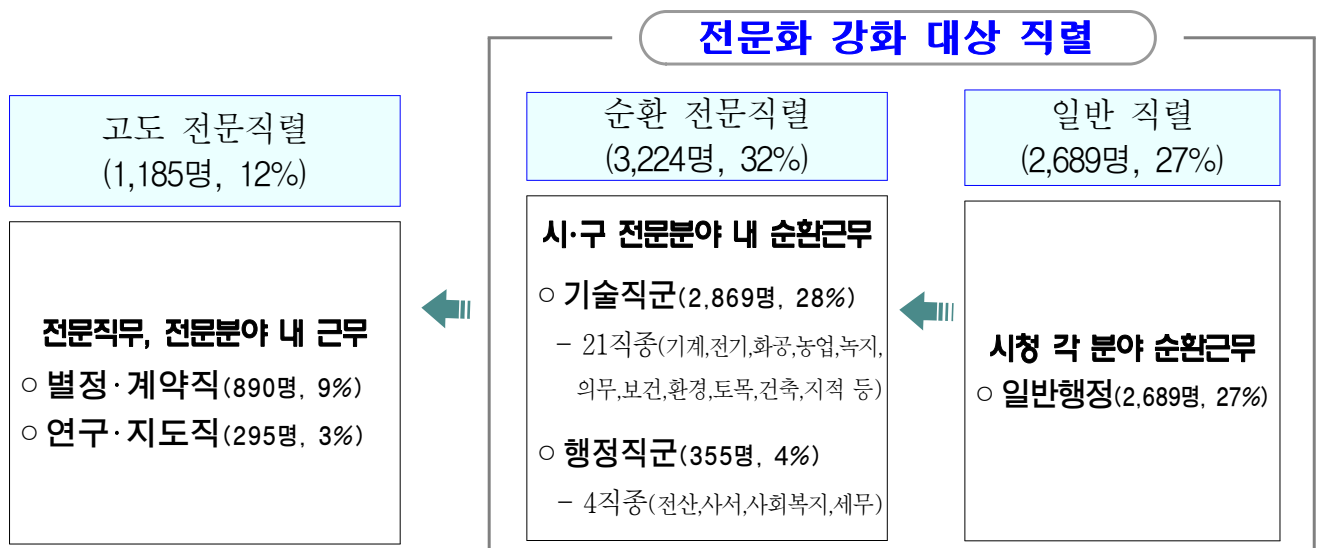
- 대면보고 문화에 따른 유연근무 미활성화, 일부 눈치보는 연가 사용
- 여가시간 증가 등 생활패턴 변화로 ‘일과 가정의 양립’에 대한 직원욕구 증대

희망일기 - No.151,318,344,349,351,463,488 등

- ◆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, 실무사무관제 확대 등 인사제도 2차 혁신안 마련
- ◆ 재택근무, 유연근무 활성화 및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적근무 지원 시스템 구축

1 공무원 전문능력 배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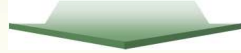
○ 공무원 전문성 현황 - 시 공무원 총 10,123명 ('12년 말 현원)



※ 기능직 : 3,025명(30%), 23직종(기계, 전기, 영사, 사육 등), 유사·반복업무 수행, 순환근무

추진방안 및 목표

- ❖ 우수인재 유치 : 민간경력자 등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
- ❖ 기존 인력 전문성 배양 : 전문직위제 및 전문분야 보직관리로 장기근무 유도
직무교육, 학위과정 지원 등 자기계발 기회 부여



“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”

- 2020년까지 「서울전문관」 2,000명 양성(전체공무원의 20% 한부서 근무) -
 - ▶ 계약직 등 기존 1,200명
 - ▶ 신규 양성 800명(민간경력자 채용 50% + 내부공무원 전문직위 지정 50%)

□ 역량 있는 '우수인재 채용'

- 우수 민간경력자 채용 : 시 신규채용 인원의 10% 민간경력자 채용('13년 25명)
 - 현재 민간경력자 13명 일반직으로 시범 채용 중(7급 10, 9급 3명)
 - 생활미술 전시기획, 상수도 국제협력, 시민단체활동 지원, 행정정보 공개, 공무원 노무관리, 건설업관리, 도로포장,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, 재난안전, 도시시설물 안전관리, 주택통계, 녹지(그린월) 관리, 공원(조경) 설계
- 면접 강화 : 단순 지식·상식 ➡ 공직적합성 사전 검정
 - 인·적성검사, 블라인드 면접, '경력개발 목표' 면접 도입, 영어면접 확대(행정직렬→전 직렬)
- 채용시기 유연화로 인력수요 변동에 능동적 대처 : 연1회 → 2회 원칙

□ '보직관리' 개선 - 전문관 육성

- 전문직위제 운영 - 5급 이하 일반직 2020년까지 400명 지정
 - '13년 25명 → '14년 100명 → '15년 150명 → '20년 400명
- 전문분야(10개) 보직관리제 운영 - 전문분야 내에서 순환근무

연 영

- CDP 제도('11.9) : 행정5급, 행정·세무전산6급
 - 실적가점 최대 2점(17개 분야 461개 직무)
 - ↳ 경로설계의 복잡함, 진출·승진 수단으로 희망
- 새서울전문인제도('00년) : 5급이하
 - 실적가점 0.25점(교통 등 5개 분야)
 - ↳ 한정된 분야, 승진시 가점활용 후 타보직 전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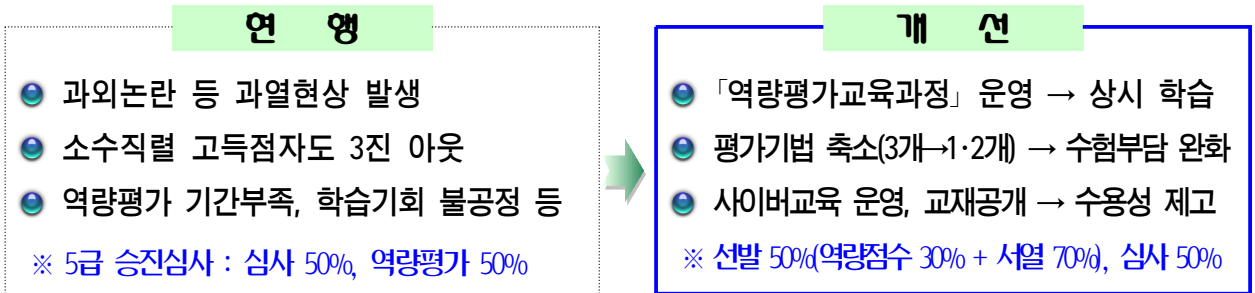
개 선

- 대 상 : 5~7급 일반직 공무원(공모)
- 인센티브 : 승진·교육 등 우수 장기근무자 우대
- 분 야 : 복지, 경제진흥, 교통, 기후환경, 도시계획(주택), 도시안전(지하철), 문화, 교육(여성), 푸른도시, 상수도
- 보직관리 : 전문분야 내에서 순환근무 원칙
 - ↳ 직급변동 후에도 동일 전문분야에 근무

- '실무사무관 제도' 운영 - 총 29개 직위(행정 12, 기술 14, 기능 3)
 - 전문성이 높은 실무직위에 5급을 배치하여 전문성과 정책기능 강화
 - 인사과에서 부서단위까지 임용관리하여 실행력 제고(최소 6개월 이상 근무)
 - 실무직위 6개월 이상 근무 후 해당 팀장 보직
 - 담당업무 : 전문성 요구 업무, 통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프로세스 혁신 업무 등
 - 직무관리 : 실무사무관이 직접 기안, 팀장 협조, 과·실국장 결재

□ 5급 '역량평가제도' 개선

- 선 승진심사 후 역량평가 ➡ 선 역량평가 후 승진심사로 전환
 - 교육과정 : 현행 "준비교육과정" 확대 개편(3일→5일), 연 500명(10회)
 - 평가기법 : 현행 3개(서류합, 사례연구, 역할연기) → 1~2개로 축소



□ '전보제도' 개선 - 순환전보 개선으로 업무의 연속성 확보

- 정기인사 축소 : 연2회 → 1회(같은 전보에 따른 직무 전문성 약화 방지)
- 전보제한기간 연장 : 현행 1년 → 2년(한 부서 2년 이상 근무 유도)
- 근무성적평정 시기 조정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: 6.30/12.31 → 4.30/10.31
- 직무전환기간 운영으로 조기 직무적응체계 구축 : 3주(발령일전 1주, 후 2주)

계약직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(안)

- ❖ 채용 및 평가의 전문성·공정성 확보를 통한 우수인재 채용
 - 상위직급으로의 재채용 기회 확대
 - 실국별 자체임용 및 계약기간 운영 차등 ➡ 전문기관 일괄채용, 계약기간 단일화(2년/3년)
 - 실국별 평가 실시 ➡ 가~나 등급에 대하여 시단위 평가
 - 근무실적평가위원회 내부위원 임명 ➡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외부위원 위촉(1/3 이상)
- ❖ 평가에 상응하는 보상과 처우개선으로 전문가로서의 자긍심 제고
 - 성과우수자 계약기간 자동연장 및 연봉 인상, 장기재직자 교육 확대, 대외직명 사용 등

□ 직무와 연계된 교육훈련체계 강화

○ 역량향상을 지원하는 상시학습프로그램 내실화

2012년		2013년									
◆ 연간 학습목표 시간제 운영 <table border="1"> <tr> <td>2~3급</td> <td>4급</td> <td>5급 이하</td> <td>기능직</td> </tr> <tr> <td>30시간</td> <td>50시간</td> <td>80시간</td> <td>30~80시간</td> </tr> </table>		2~3급	4급	5급 이하	기능직	30시간	50시간	80시간	30~80시간	◆ 핵심가치 및 리더십과정 강화 ▶ 「희망서울 시민행복」 과정(2년 1회 의무화) ▶ 「직급별 리더십 과정」 집합교육 의무화	
2~3급	4급	5급 이하	기능직								
30시간	50시간	80시간	30~80시간								
◆ 직무교육 및 직무집합교육 이수비율 ▶ 직무교육 53%, 직무집합교육 37%		◆ 직무교육 56%, 직무집합교육 43% ▶ '14년까지 직무교육 60%, 직무집합교육 50%까지 연차적 확대									

○ 市 중간관리자(4·5급) 및 자치구·투자출연기관 간부급 교육확대

- 간부급 관리역량 및 자치구·투자출연기관과 공유·협력 제고
- 市 승진자(상·하반기 2회), 재직자(5급- 5회 150명, 4급-2회 60명)
- 자치구 간부급(4급 이상), 투자·출연기관 임직원 대상 핵심가치 교육(연1회)

○ 학습 결과물에 대한 전직원 공유 확대

- 인적자본 개념 개인별 교육이력, 자격증 보유현황 등 직무역량 정보 지원
- 국내·외 훈련자, 학습동아리 자료 통합관리로 시정 활용도 제고

○ 직무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신규·전입직원 멘토링제도 확립

- 신규 전입직원 대상 부서 내 멘토·멘토링 지정·운영
- 퇴직 직원, 공로연수직원 활용 멘토링 강의 등 정례적 운영(반기별)

○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외훈련제도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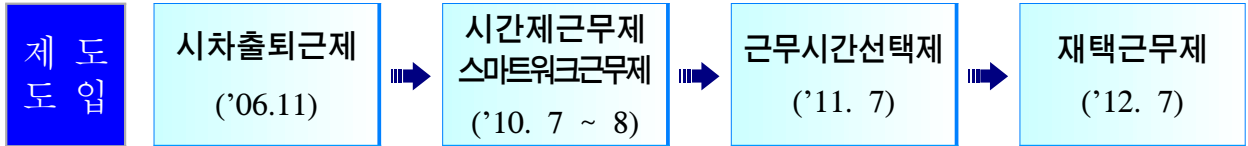
- 비영어권 과견확대와 직무와 연계한 장기국외훈련 운영 : 33명 선발

2012년		2013년													
◆ 훈련 이수 후 직무연계와 성과 관리 미흡		◆ 베이징, 도쿄 등 비영어권 직무관련 훈련 확대 ▶ 학위과정은 교통, IT 등 전문분야 위주 정예화 (학위과정 선발 '12년 15명 → '13년 12명)													
◆ 국가별·과정별 국외훈련 현황 <table border="1"> <tr> <th colspan="2">국가별</th> <th colspan="2">과정별</th> </tr> <tr> <th>영어권</th> <th>비영어권</th> <th>학 위</th> <th>직 무</th> </tr> <tr> <td>40명</td> <td>8명</td> <td>34명</td> <td>14명</td> </tr> </table>		국가별		과정별		영어권	비영어권	학 위	직 무	40명	8명	34명	14명	◆ '학습성과공유방' 운영 및 성과 보고회 개최 ◆ 훈련분야 의무보직(3년 이내) 및 전출 제한	
국가별		과정별													
영어권	비영어권	학 위	직 무												
40명	8명	34명	14명												

- 해외 선진정책 현장체험형 단기국외훈련 운영 : 53개팀 423명

2 신명나게 일하는 일터 조성

□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'유연근무제' 활성화



○ 재택근무제 시행 : 시범실시-활성화 등 단계별 추진

- 시범실시(1~2월) : 부서별 1명(출산·육아·장애인·원거리 출퇴근자 우선 실시), 주 1회
- 활성화(3월~) : 시범실시 참여자 설문조사, 재택근무제 가능업무 발굴, 지침 마련

○ 유연근무 참여 목표치 연차별 상향 시행 : 매년 10% 확대

- 현원 대비 : '12년 794명(7.8%) ⇨ '13년 1,000명(10%) ⇨ '14년 2,000명(20%)

○ 「유연근무제의 날」 운영으로 분위기 확산 : 월 2회(전 직원 참여)

- 홍보강화 : 커뮤니티 운영('12.7), 실적공개(분기), 수기공모(5월), 우수부서 표창(연말 3개), E/V 홍보 등

□ 직원휴가 활성화로 재충전 기회 제공 - '눈치 안보는 휴가' 정착

◆ 2012년 연가사용은 1인 평균 6.28일로

전년 4.69일 대비 1.6일 증가

- 사용일수 : 4급 → 6급이하 → 5급 → 3급이상 順
- 증가일수 : 4급 → 3급 → 6급이하 → 5급 順

구 분	평균사용 일수		증 감
	12년	11년	
계	6.28	4.68	1.60
3급이상	5.84	3.47	2.37
4급	6.76	3.77	2.99
5급	6.16	4.97	1.19
6급이하	6.29	4.67	1.61

○ 4급 이상 연가보상비 지급 제한 5급으로 확대

- 4급 이상(확대) : 13일('12년) → 10일('13년)
- 5급 (신규) : 20일('12년) → 13일('13년)

○ 월 초과근무 만근자(월 57시간) 월 1회 연가사용 의무화

- 연가 미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일수에서 제외

○ 6급 이하 격무직원에 대한 특별휴가 실·국장 자율판단 실시(총 5일 이내)

○ 명절연휴, 샌드위치데이 휴가범위(1/5~1/4범위) 제한 삭제 : 부서 자율실시

○ 실·본부·국 및 부서별 연가사용 현황 분기별 공개(간부회의)

※ 휴가계획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의견수렴 후 시행

□ 수평적 직장문화 조성

○ 가족친화 프로그램 다양화

- 오피스 커밍데이 정례화(5월, 10월) : 시청 방문, 문화체험 등
- 직원 스트레스 힐링 프로그램 확대('12년 58명 → '13년 120명)
- 「가정의 날」 확대(주1회+임시지정일), 토·일 중 1일 의무휴일제 도입
- 리버스 멘토링 도입 : 신규자가 상사·동료를 평가하는 역할극(연1회)

○ 시장과의 소통프로그램 확대

- 「시장과 직원간 대화의 시간」도입(분기1회): 가정생활 등 특정주제 사전 선정
- 국·과장급은 연찬회(상·하반기), 리더십 교육(연4회) 등 프로그램에 추가
- 6급 이하는 점심시간 도시락(樂) 미팅 등 격의없는 즉석모임 개최(월1회)
- 점심·일과 후시간을 활용 「신명나는 희망일터 전문가 특강(가칭)」실시(월1회)

○ 원거리 출근자를 위한 출근버스 도입 추진(일산·분당·의정부·산본 등 권역별 거점)

□ 생활안정 및 여가생활 지원

○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확대 : 35억('12) → 40억('13)

- 반월세주택의 임대보증금까지 대출지원 확대(주택임대차 전환추세 반영)

〈원금지원 방식〉 - 1인 평균 5천만원 소요	➔	〈이자지원 방식 - 은행에서 융자〉 - 1인 평균 50만원 소요(3% 이자 초과분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○ 「복지쿠폰(Welfare Coupon)」 신규 도입 : 1인당 10만원 상당

- 연수원, 체육시설, 직장외국어강좌 등 市 자체시설 및 서비스 이용시 활용

○ 휴양시설 확대 : 연수원 3개소 341실, 콘도 111구좌 보유

- 직원 선호지역을 반영, 콘도회원권 15구좌 추가 구입

□ 직원 건강관리 지원 강화

○ 부속의원 진료서비스 확대

- 가정의학·내과 진료, 예방접종 등 ⇨ 이비인후과 진료, B형간염 등 사전예방기능 강화
※ 한방진료실 설치·운영 (50㎡ 규모, 청사내 유휴공간 활용, '13. 6)

○ 사업소 운동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(본청은 신청사 체력단련실 이용)

- 근무시간 중 체력단련실 운영 : 이용시 입실·퇴실 체크로 근무시간에서 제외

□ '직원중심', '사람위주'의 최적근무환경 조성

○ 물리적 근무환경 개선

- 실내온도, 공기질, 조도, 사무기기에 대한 표준안 마련 및 단계적 개선
- 청사별 1실 이상 전용휴게실 설치 및 확대(다양한 용도(수면, 담화 등)의 휴게실 설치)
- ※ 주요청사별 전용휴게실 현황 (체력단련실 등 휴게공간 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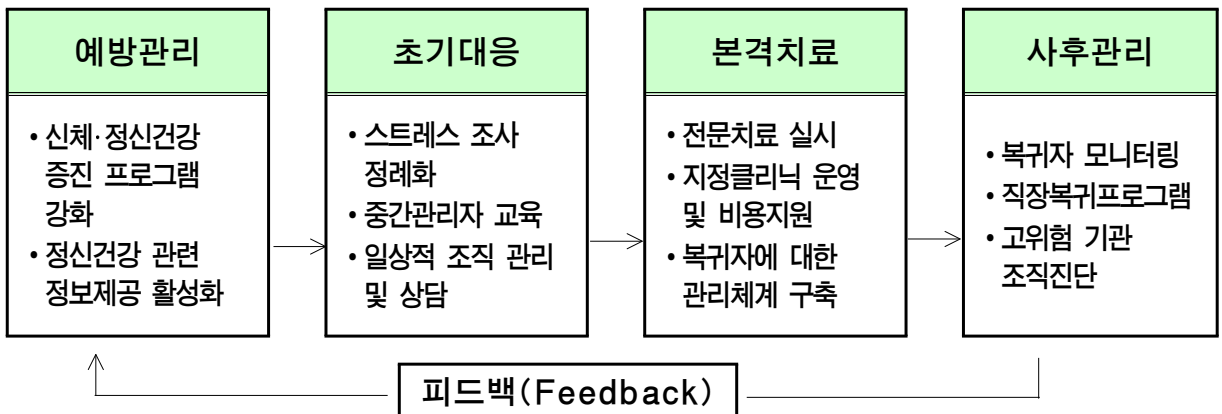
구 분	신청사	서소문청사	상수도본부	한강본부	은평병원	차량정비
인원(명)	2,135	2,028	259	150	209	47
면적(m ²)	156(4개소)	86(2개소)	44(1개소)	54(2개소)	없음	없음

- 현업기관(차량정비사업소, 물재생센터 등) 공기질 개선 등 작업환경 개선

○ 근무공간, 공용공간 미술품 등 전시 확대(동호회 활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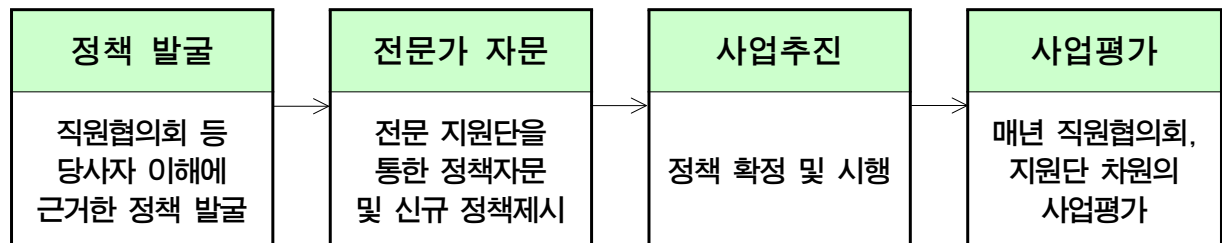
○ 청사내 음악방송 다양화 - 공간·시간대별 음악방송 실시(시민소통기획관 협조)

○ 직무스트레스 4단계 체계적 관리[기업 EAP(직원지원프로그램)모델 도입]



- 「스트레스 치유센터」 설치·운영('13.3 오픈, 별관2동 3개 상담실, 전문요원 6명)

○ 최적근무환경 지속적 조성을 위한 정책입안 및 자문 체계 구축



- 실경험자 위주의 근무환경개선 정책 제시를 위한 직원협의회 구성(15명)
- 직업환경, 정신건강 등 다양한 정책 자문을 위한 지원단 구성(10명)
- ※ 타기관 전출직원 면담을 통해 市조직과 타조직 스트레스 비교·분석('13.2)

Ⅲ.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

〈 현황 및 실태 〉

- ◆ 시민사회단체 발전을 위한 종합적·체계적 계획 마련 필요성 대두
 - 단편적 공익사업 중심 지원으로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마련 미흡
 - ※ 서울지역 소재 시민사회단체 수는 전국대비 28.7%(7,440개)로 추정됨
- ◆ 시정에 참여중인 민간조직·단체가 상당수 있으나, 市정책 활용도 미흡
 - 시정참여 인사 : 476천명('12.8.31현재)

희 망 일 기 - No.118, 431, 564, 829, 564, 829

- ◇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창구 구축, NGO 빌딩 마련 등 시민사회 인프라 만들기 및 SIB 도입
- ◇ 서울시 관련 인사들의 디렉토리 작성, 시정참여 시민들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

1 시민사회단체와 생산적 파트너십 강화

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「민관협력 종합계획」 확정·시행

○ 중점 추진과제 : 6개 과제

① 시민사회단체 활동역량 강화

④ 기부문화 확산

② 시민사회단체 재정지원

⑤ 시민자원봉사 활성화

③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구축

⑥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

○ 향후 계획

-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TFT 구성·운영(13.1월) : 시민단체, 전문가 등
 -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추진방향 및 구체적 실행방안 도출
- 기본계획 확정·발표(13.3월말), 세부계획 수립·추진(13.4월~)

민간단체 공모사업 개선을 통한 재정지원 효율화

현 재

- 연1회 공모 지원
- 등록된 민간단체 위주 지원

○ 1년 이내 사업만 지원

○ 실적위주 평가·정산, 성과보상 없음

개 선

- 정기, 수시, 지정공모(SIB)로 다양화
- 풀뿌리 민간단체까지 지원사업 확대

○ 1년, 2~3년 계속사업으로 구분 지원

○ 실적평가·정산 + SIB적용 인센티브 지급

⇒ 자살예방분야 SIB기법 시범 도입 : 사업비 6억원(사회투자기금 50% 활용)

※ '12년 147건 / 2,583백만원(사업별 50백만원 이하) → 13년 2,583백만원

2

시정관련 「민간조직·단체」 네트워크 구축

□ 활용 목적

-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고, 재난·재해 대응 등 시정참여 유도
- 시정자문 기회 확대, 시정모니터 등 시민과의 소통창구 활성화

□ 구축 개요

- 구축대상 : 시정참여 인사 총 476천명

구 분	행정지원	행정협력	시정자문	시정참여
조직·단체	동반장, 주민자치위원	자원봉사자, 의용소방대 등	민관협의체, 위원회, 자문단	모니터단, 시민·감시평가단 등
인원(명)	106,902	345,610	3,514	20,679

- 구축수준 : 이름, 성별, 연령, 전화번호, 이메일, 소속 단체명 등

※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유식별 번호(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여권번호 등) 수집 제외

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수집·활용은 본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각종 회의 등을 활용 네트워크 구축 대상자 이해설득, 행정 및 실행력 확보

□ 구축 방법 : 단계별 추진

- 1단계('13.5.31 한) : 시정 직접 협력 인사 135,624명

- 시 주 관 : 실·본부·국별 책임 추진 28,722명
 - 위원회·자문단 등(3,514명), 홍보조직(1,531명)
 - 시민감시·평가단(19,148명), 의용 소방대(4,529명) 등
- 자치구 협력 : 부구청장회의 협조 등 106,902명
 - 통·반장(97,660명), 주민자치위원(9,242명)

- 2단계('13.9.30 한) : 시정 지원인사 341,081명

- 자율방범대(12,410명),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관리소장(20,825명)
- 자원봉사자(244,951명), 서울시 재난안전 네트워크 등(62,895명)

- 3단계('13.12월말) : 市 지원 시설·직능단체

- 시 지원 복지·여성·보육·문화·체육시설 종사자
- 법정단체, 이익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

➔ 네트워크 서버 구축시스템 설치('13.5.31한) : 「시정관련 인사 네트워크 시스템」 구축(1억원)

3 시민사회단체 활동공간 조성

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강화와 사업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성

□ NPO센터 설립·운영 - 1단계('13년 9월중 완료)

- 위치·규모 : (구)질병관리본부 8동 4층 / 838㎡(254평)
 - 공동작업공간, 상담공간, 자료실, 행사공간, 회의공간 등
- 주요기능 : 시민사회단체 발전 기반 조성, 풀뿌리 단체 역량강화
 - 활동가 교육, 단체설립·재정자립 컨설팅,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
- 운영방법 :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단체나 법인에 민간위탁
- '13년 예산 : 699백만원

□ NPO 빌딩 확보 - 2단계('13년 지원근거 마련 → '14년 타당성 조사·분석)

- 필요성 :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내중심부에 활동공간 조성 희망
- 확보방안
 - 시 유휴시설 활용 : (구)질병관리본부, 복지재단 건물 등
 - 소규모 재원으로 추진 가능하나, 시민사회단체 수요충족 미흡
 - 시내 중심내 적정건물 확보(YMCA건물 등) 방안 검토
 - 시민사회단체 수요 충족하나, 민간건물 매입에 따른 시 재정부담
- 사업추진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
 - 현행법상 사유재산을 수익계약에 의해 특정단체에 임대 곤란
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건의
 -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한 예산확보 및 공유재산 취득에 상당한 기간필요
 -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시의회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

□ 권역별 센터 구축 - 3단계('14년 이후)

- 공공시설(소방서, 파출소, 동주민센터 등) 이전 등 유휴건물 발생시 우선 확보 추진(4개 권역별 1개소)

4

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지원 대책 수립·시행

〈 현황 및 실태 〉

- ◆ 서울지역 6,230명, 전국(22,210명) 대비 28.1%, 최다거주
- ◆ 대부분 임대APT·전·월세 거주, 41.1%가 기초생활수급자
경제활동저조(실업률 13.1% / 일반국민 실업률 3.7%)

희 망 일 기 - No.223, 677

- ◇ 탈북자 공무원 채용, 탈북자 단체 네트워킹 등 탈북자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

□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지원 대책 수립·시행

○ 새로운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강화

- 시 산하 투자·출연기관 북한이탈주민 채용인원 목표설정·운영
 - 현재 11명 → 목표 80명(신규채용 인원의 1% 이상)
 - ▶ 투자·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채용목표 반영하여 실적 평가
- 북한이탈주민 채용박람회 개최('13년 상·하반기 각 1회)
 - 경찰청,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참여, 민간기업과 1:1 취업상담 실시 등
- 전문적인 직업훈련 강화 : 시(4개 기술교육원), 민간교육기관 활용

○ 북한이탈주민 신규 전입자 환영 및 생활지원 강화

- 환 영 식 : 축하엽서(시장명외), 꽃다발 전달, 시 담당 부서장 환영식 참석
- 지원대상 : 市 전입 북한이탈주민 300가구
 - 월 25가구 내외, 가구당 20만원 한도
- 지원품목 : 서랍장, 소형장롱, 냉장고 등 기초생활 품목

○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구축

- 「서울특별시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조례」 제정('13년 상반기)
-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립·운영(20인 내외)

⇒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발표('13.2월초)

IV. 시·자치구간 협력강화로 자치역량 제고

〈 현황 및 실태 〉

- ◆ 민선5기 들어 과거에 비해 구청장들의 요구사항 대폭 증가 추세
 - 재정문제 지원(구청장협의회), 지역현안 공동대응(권역별협의회), 면담기회 확대(구청장)
- ◆ 자치구의 세입기반은 약화된 반면, 복지정책의 지속적 확대로 재정난 심화
 - 사회복지비 35.6%('08년) → 44.6%('13년), 재정자립도 51.0%('08년) → 41.8%('13년)
- ◆ 시-구간 인사교류가 저조하여 상호 행정협력 및 균형발전 미흡
 - 파견 교류(4~6급) : '10년 34명 → '12년 11명 / 전·출입(전직급)교류 '10년 71명 → '12년 60명

희 망 일 기 - No.658, 823

- ◇ 서남권역 현장시장실 운영, 동주민센터, 지하철역 등에 「순회 시청 제도」 검토
- ◇ 시와 자치구의 협력, 자치구간의 협력시스템 강화방안 마련

1 시·자치구간 협력 시스템 개선

시장과 구청장간 협력창구 상시 운영

○ 시장·구청장 간담회 및 시장면담 기회확대

- 전체 간담회 확대(연2회→연3회), 권역별 간담회 확대(분기1회→격월1회)
- 구청장의 시장 면담기회 확대(찾아가는 시장면담 추진)
 - 필요시 정책특보 활용한 자치구 방문 병행 추진

○ 현장시장실 운영 : 지역현안 해결방안 심층논의 및 대안 제시

- 2차 : 구로·금천·양천·강서('13.2.), ※1차('12.11.) : 은평뉴타운
- 3차 : 동북권, 동남권 등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 운영 확대

시·자치구간 현장중심 협력채널 다각화(간부진, 실무자 Two-Track)

○ 시 주요사업 정책 수립시 자치구 협의 강화

- 분야별 정책간담회(국장,과장급), 시·구 정책 T/F 및 시 핵심사업 설명회 개최

○ 자치구를 찾아가는 부구청장회의 개최

- 현장중심 회의(예, 골목길 제살대책), 시민참여(시민단체, 전문가) 및 화상회의 확대

○ 시-자치구 행정국장, 실무팀장 워크숍 정례화(봄, 가을 2회)

□ 동주민센터 기능전환 추진

- ◆ 423개소, 동평균 인구 20,400명(최대 신정3동 57천명 / 최소 소공동 1.3천명)
- ◆ 복지상담, 증명민원 발급 등 지역특성과 무관한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
 - ※ 일부 자치구에서 동사무기능 재조정 등 복지기능 강화 중(성동, 서대문)

○ 추진계획 : 주민 수요조사 및 학술연구용역 실시

- 동주민센터 기능 추가를 위한 주민수요조사 실시('13.2.~3.)
 - '13년 시범으로 50개동(구별 2개)선정조사, 조사결과를 연구용역에 반영
- 학술연구용역 추진('13.2.~7.) : 사무조정, 인력재배치 등 개선방안 마련
 - 동주민센터를 유형별로 표본 설정하여 기능전환 모델 제시
 - 복지건강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및 성동, 서대문구 사례 반영

○ 추진방법 : 용역 결과를 기초로 자치구와 협의 추진('13년~14년, 2년간)

- '13. 8월 : 동기능개선 모델제시
 - ※ 동 통폐합시 : 아파트일반형·취약형, 단독주택일반형·취약형, 상가일반형·취약형
- '13 하반기 : 시범동 및 희망 자치구 기능개선
- '14년 : 전동 기능개선 확대

□ 「자치구 소식지」의 市 정책 홍보채널 활성화 추진

- 현 황 : 25개구 318만부 발행(월1회), 비정기적 시정홍보
- 시정홍보면 고정확보, 좋은 소식지 선정, 중앙일간지 보급소 활용 배달 등

2 자치구 재정지원 방식 개선

- ◆ 자치구 시비 지원 : 총 5조 729억원(시 일반회계 15조 6,116억원 대비 32.5%)
 - ▷ 조정교부금 18,530, 보조금 19,092, 재정보전금 9,841, 징수교부금 3,266
- ◆ 자치구 재원의 시비의존도(46.3%)가 매우 높으나, 건전재정 촉진·유도장치 미흡

□ 자치구 교부금 시정협조에 따라 차등지원

- 특별교부금(1,853억원) 시책수요자원 확대·운용 : '12년 167억원→'13년300억원 이상
 - 시 주요시책사업 추진 지원(200억원), 시정협력도 및 건전재정운영 평가 차등지원(100억원)

□ **시비보조사업(7,309억원) 지원기준 개선**

- 자치구 현황, 자체사업, 보조사업 등 재정분석 결과반영 개선안 마련('13.2~7월, '14년 반영)

※ '13년 시비보조금 : 19,092억원(시비보조사업 7,309, 국비매칭사업 11,783)

□ **자치구 인센티브사업(110억원) 개선**

- 선택·집중을 위한 사업수 조정(15개 → 12개 내외), 연속 부진 자치구 성과제고 컨설팅 실시

3 시·구간 인사교류 활성화

□ **인적 교류협력 강화 - 시인 우수 행정능력 전파와 상호 네트워크 구축 지원**

▷ **현황** : 기술직군 전산직은 3년간 평균 975명(11.5%), 반면 행정직군은 136명(0.6%) 미흡

구분	공무원 현원 ('12.12.31 현재)			전·출입 교류 (시↔구)			
	전체	시	자치구	평균	'10년	'11년	'12년
계	40,273	10,123	30,150	1,115(2.8%)	1,282(3.2%)	1,110(2.8%)	952(2.4%)
행정직군 (행정·세무·사회복지)	21,350	2,846	18,504	136(0.6%)	155(0.7%)	108(0.5%)	144(0.7%)
기술직군·전산직 (통합인사)	8,488	3,067	5,421	975(11.5%)	1,117(13.2%)	1,002(11.8%)	806(9.5%)
기타(연구지도·기능· 정무·별정·계약)	10,435	4,210	6,225	4(0.04%)	10(0.1%)	-	2(0.02%)

▷ **행정직군 시-구 인사교류 저조 원인**

- 구 직원의 시 근무 기피, 본인 동의필요에 따라 인사교류 저조
- 파견교류자의 소속감 결여 및 문제직원 방출목적으로 악용되어 기피
 - * 파견 교류(4~6급) : '10년 34명, '11년 34명, '12년 11명
- 승진소요연수 단축과 개인역량 차이로 구직원의 시배치 어려움

- 인사교류 개선 - 행정직군 인사교류 '12) 144명(0.7%) ⇨ '13) 420명(2.0%)

✓ **교류기준**

- 복귀 후 행정경험 활용가능한 직원(연령 고려) 대상 교류(1~2년 정례적 교류)
- 원소속기관 복귀 보장으로 자치구 공무원 교류 부담감 해소(희망시 잔류)

① 4·5급 중간간부 교류 정례화로 실질적 협력기반 구축

－ 시·구별 4급 1명, 5급 1명(총 100명)

(예) 서대문구 : 시 4급과 자치구 5급 교류('13. 1. 1자)

② 자치구 6·7급 승진자(희망자 포함) 중 일정비율 시 근무 의무화

－ 시·구별 6급 2명, 7급 4~5명(총 320명)

－ 자치구 신규·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'시·구 교류 동의서' 사전 징구

※ 세무직 등 행정직군 소수직렬도 인사교류 활성화

○ 향후계획 : 「구청장협의회」 안건으로 상정

'13년 행정국 일자리 창출 계획

□ 정책환경

- 공급·수요 문제에 따른 청년층 취업난 심화 ⇒ 공공분야 채용증대 필요
 - (공급측면) 고학력화와 중소기업 취업기피 및 산업계 요구와 동떨어진 교육
 - (수요측면) 행정수요 다양화 및 전문화에 따른 민간 경력자 채용 확대 요구
-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필요
 -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임용 확대와 비정규직 고용합리화 시급

□ '13년 일자리 창출 전략

- 공공분야 채용규모 확대 및 비정규직 고용합리화로 量+質의 일자리 창출
 - 공무원 채용확대('12년 987명 → '13년 1,121명, 14% ↑) 및 청소용역 직접고용 추진
-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을 일자리와 연계, 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 설계
 - 탈북자, 다문화가정, 저소득층 등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성과 평가 인센티브

□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계획

① 공무원 채용 : '13년 신규채용 총 1,110명 예정(시·자치구)

- 전문성 소요직무에 **민간 경력자** 채용 확대(시 신규채용 인원의 10% 내외) : 25명
- 전체 신규채용 인원의 10% 이상 **장애인** 채용(법정의무 3%) : 111명
- 9급 공개경쟁 채용인원의 10% 이상 **저소득층** 채용(법정의무 2%) : 111명
- 9급 기술직 신규 채용인원의 30% 이상 **고졸자** 채용(법정의무 없음) : 23명

② 공공일자리(직접일자리)

- 청소·시설관리 용역, 신청사 안내도우미, 아르바이트대학생 활용 등 19개 사업
(단위 : 백만원 / 개)

'13년 예산	고용기간별 고용인원				
	계	3개월이하	4~6개월	7개월~1년	1년 이상
17,253	5,549	3,420	1,736	178	215

※ 청소용역원 115명 간접고용 → 직접고용으로 전환

별첨 - 일자리 창출 계획

시책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방안

일자리 영역 확대 및 사업간 연계

- ① **시민사회 단체 지원 효율화** ⇒ **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유도**
 - SIB 도입과 관련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성과와 보상 체계 마련
- ② **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** ⇒ **새로운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강화**
 - 탈북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으로 원활한 한국생활 적응 및 사회 통합 유도
 - 시산하 투자출연기관 채용인원 목표화, 채용박람회(32명) 개최 등

시책사업과 연계된 일자리 정보 제공활성화

- ③ **시·자치구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추진** ⇒ **정보공유 활성화**
 - 개방공간을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, 일자리 정보 교환 활성화
- ④ **시민체감형 통계서비스 제공** ⇒ **일자리 정보제공**
 - 생활밀착형 통계정보 제공 및 통계 분석서비스 강화로 취업·창업 정보공유 활성화

새로운 일자리 발굴 → 일자리의 개념 확대

- ⑤ **신청사 관광 명소화 추진** ⇒ **신청사 관광자원화로 신규 일자리 창출**
 - 상설전시 기능 도입 등으로 관련 산업활성화 및 관광객 증대 유도
- ⑥ **동주민센터 기능전환** ⇒ **센터별 특화서비스 제공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**
 - 복지, 문화 등 특화된 기능에 따른 복지 도우미, 강사 등 신규일자리 창출

타 실·국·본부 협조 및 연계가 필요한 사항

- 각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민간단체 공모사업 발굴·신청(공통)
- 산하 투자출연기관 탈북자 채용확대 유도(기획조정실)